

尹, 전략적 다자외교전 펼쳐… 무력도발 ‘北 해법’ 찾을까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내일 아세안+3 회의 참석하고
7일 18국 정상과 안보현안 논의

한중·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때
북한에 상당한 압박 작용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문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다지면서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자유와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전략적 다자외교전에 돌입한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술핵 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을 시행하면서 무력강화를 주문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감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오는 9일 정권수립 75주년을 맞은 구구절에 ‘민간무력’ 열병식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월과 7월 열병식을 한 데 이어 3번째 열병식으로,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한 해 동안 열병식을 3차례나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은 10월 중 3번째 정찰위성 시험을 한다고 예고한



지난 7월 12일(현지시간)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캄보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로 얻은 국제적 위상과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책임을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한중 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의장국으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한 지 꽤 됐다”며 “어떻게든 바람직하게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중국과 협의하고 있고, 계속 충실하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 도발과 관련 “북한의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정찰위성 발사실패, 내부의 경제 사정, 사회 결속력 도모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난제들을 안고 있는 가운데 외부에 북한의 도발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도발의 일정과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실제 실력과 겉으로 보이는 능력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도착 후 이틀째인 6일(현지시간) ‘아세안+3(한일중)’ 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7일 18개국 정상들이 역내의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 국제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개선하고,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무엇을 기여할지 등을 밝힌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다보스포럼 참석을 필두로, 방일을 통한 한일관계의 획기적 개선, UAE(아랍에미리트)·미국·베트남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이나, 폴란드 방문 등의 일정을 숨 가쁘게 이어오면서 동맹외교와

파트너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의 자산을 축적해 왔다”며 “특히, 4월의 미국 국빈 방문과 8월의 캄보 데이비드 한미일 협의회 출범을 통해 한국이 자유와 연대의 중추적 행위자로서 글로벌 협력의 담론과 표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 축적한 이러한 외교적 자산을 바탕으로, 이제 정부는 남은 하반기에도 주요 다자무대와 지역외교의 장에서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기여가 우리의 국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 “글로벌 차원에서 강대국 간 가치·이념·이익 경쟁이 뜨거워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익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우리의 실용 네트워크, 비즈니스 외교를 확장하는데 인니와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1면 ‘정부, 수출반등 총력전’서 계속

한달새 주담대 2조 ↑… 금융당국, 대출문턱 높인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 515조

집값 바닥론 확산에 수요 키움

50년 만기 대출→40년으로 축소

인터넷은행도 대상자 조건 줄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예정된 가운데 금리까지 상승해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달 말 주담대 잔액은 514조99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512조8875억원 대비 2조1122억원 불어난 규모다. 집값바닥론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주담대 수요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달 한 달간 1조5000억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끌어 올리는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주담대를 지목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먼저 50년 만기 대출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종전 대비 10년을 축소키로 했다. 대출만기가 40년으로 좁혀지면 한도는 수천만원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원 차주가 50년 만기(현재 은행권 평균 금리 연 4.4%, 원리금균분상환조건)로 대출을 받는다면 4억 8000만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만기를 40년

로 좁히면 매월 갚는 원리금이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약 3000만원 줄어든다. 인터넷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말부터 주택 구입자금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가구’로 변경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와 40년 만기 주담대 금리가 같은 은행에 금리를 재산정할 것을 요청했다. 대출 만기가 10년 더 길어지면 리스크 또한 확산되므로 금리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담대 금리가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코픽스와 은행채(5년) 상승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02%포인트(p) 오른 4.28%로 2개월 연속 올랐다.

금리조건별로 코픽스 상승에 변동형이 0.04%p 오른 4.45%를 보였고, 고정형은 4.22%로 0.02%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던 주담대 금리는 6월에 이어 7월까지 두달 연속 상승했다. /구남영 기자 koogja_jea@

韓中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간 협업체계 구축 세일즈외교로 밀착지원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중국을 포함한 주력 수출시장 대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등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정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차 등 주력산업 초격차 경쟁력 유지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과 연계한 유망품목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 하반기 흑자 유지 전망… ‘4분기 수출 플러스’

정부는 수출이 11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6월부터 이어진 흑자 기조가 하반기에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와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업종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과 선박을 중심으로 점진적 개선 흐름이라는 진단이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는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으나,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관계사 ‘일감 몰아주기’ 한화솔루션에 승소

과징금 229억 부과는 ‘적법’

총수 일가 지배 회사를 부당지원한 행위로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에서 졌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

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한데 이어, 지난달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이 경영한 위장 계열사로 총수 일가 재산 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에 매각된 후에도 지원 행위는 지속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2021년 1월 각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익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고,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